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발간등록번호 31-9700484-001731-14
ISSN 2672-0280

NABO FOCUS

2021. 04. 05. 제31호

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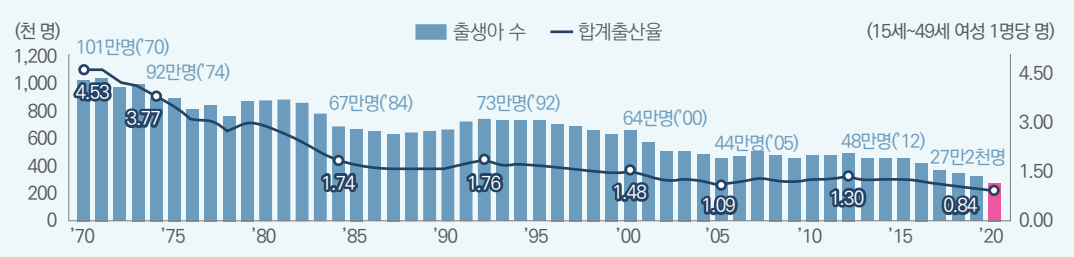
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**김경수 분석관**

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

● **통계청의 「2020년 출생·사망통계 잠정결과」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[1]은 0.84명, 출생아 수는 27만 2천 명으로 각각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**

- 합계출산율은 전년(0.92명)보다 0.08명 감소, 최근 3년 연속 1.0명 미만
- 출생아 수는 전년(30만 3천 명)보다 3만 3백 명(-10.0%) 감소, 5년 전(2016년) 보다 13만 4천 명 감소, 10년 전(2011년) 에 비해서는 19만 9천 명 감소

[그림 1] **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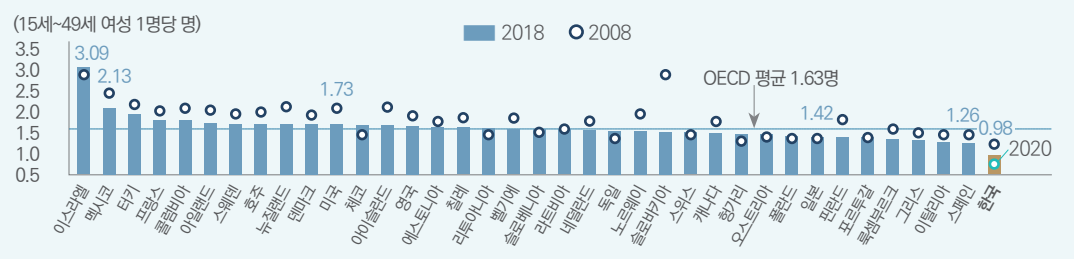


주: 2020년은 잠정치임.
자료: 통계청(2021), 「2020년 출생·사망통계 잠정결과」

● **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,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른 편임**

- 2018년 합계출산율은 0.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
  - 1970~2018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.48명 감소,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감소폭이 가장 큼

[그림 2] **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(2008, 2018)**



자료: 통계청(2021), 「2020년 출생·사망통계 잠정결과」

1) 합계출산율은 15~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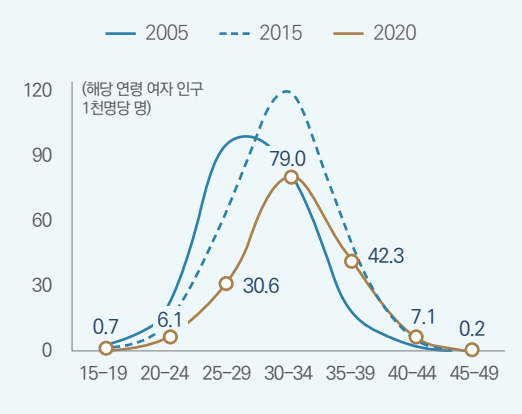
본 원고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지속적인 초저출산의 원인

● **최근 지속적인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① 인구학적 요인, ② 사회·경제적 요인, ③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문화·가치관의 변화 등 크게 3가지가 제시되고 있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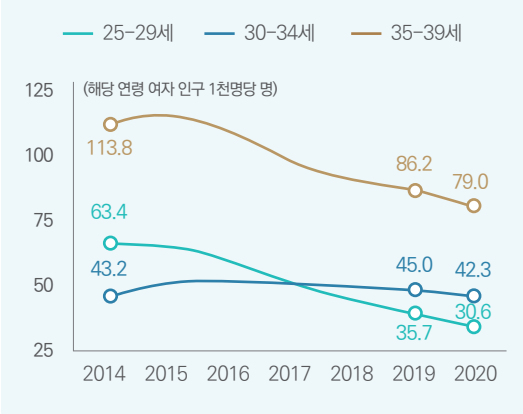
- (인구학적 요인) 만혼과 초산연령 상승에 따른 주출산 연령대의 상향이동으로 주출산 연령대의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[2)]
  - 평균 초혼연령(2001년→2019년): 남성 29.6세→33.4세, 여성 26.8세→30.6세
  - 주출산 연령대(2005년→2015년): 25~29세→30~34세
  - 주출산 연령대(30~34세) 출산율(2014년→2020년): 113.8명→79.0명

[그림 3] 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(2005, 2015, 2020)



자료: 통계청(2021), 「2020년 출생·사망통계 잠정결과」

[그림 4]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(2014-2020)



자료: 통계청(2021), 「2020년 출생·사망통계 잠정결과」

- (사회·경제적 요인) 청년층의 고용불안정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혼인기피 및 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[3)]
- (혼인 및 출산에 대한 문화·가치관의 변화)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락하여 전체적인 출산율이 하락[4)]
  -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(2010년→2020년): 64.7%→51.2%
  - 20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(2018년→2020년): 51.5%→47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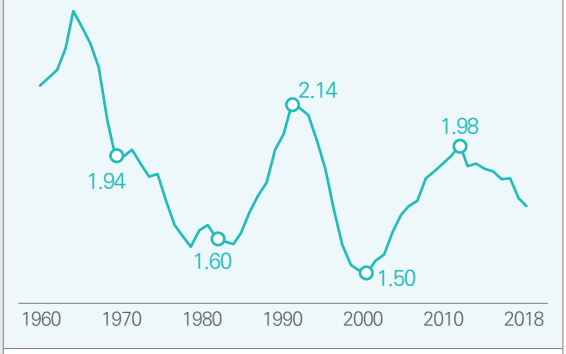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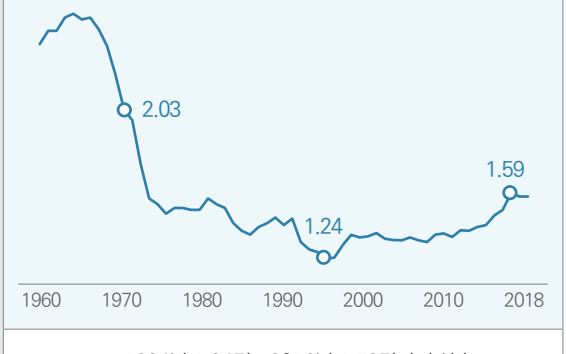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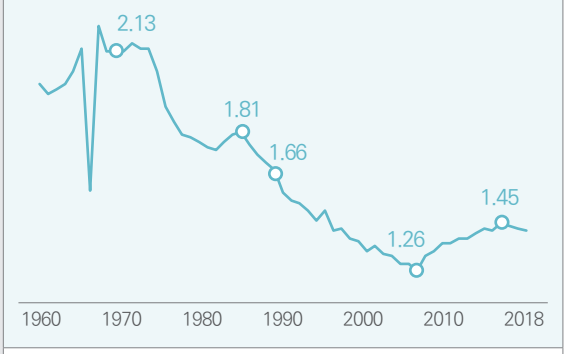
출산율 반등의 필요성

● **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수준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필요하며,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을 경험하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**

- 인구규모는 중·장기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입변수이자 생산요소이며 인구감소의 시점과 규모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현재의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상당한 규모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
  -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2040년에 0.73명이 되는 시나리오에서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,002만 명에서 2040년 4,717만 명으로 28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[5)]

2) 국회예산정책처(2018), 「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」, 경제현안분석 제94호
3)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(2020),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: 2021~2025」
4) 통계청(2021), 「2020 한국의 사회지표」, 보도자료.
5) 국회예산정책처(2021), 「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: 2020~2040」, 경제현안분석 제100호.

[그림 5]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및 주요 정책

국명	합계출산율 추이(15세~49세 여성 1명당 명)	주요 정책
프랑스	 • 1994년 1.66명→2010년 2.02명으로 상승	**양성평등 인프라 구축, 다양한 가족 형태의 포용** • 1970년 중반 이후 7가지 종류의 가족수당 신설(아동보육수당 등) • 아동·가족 관련 공공지출 확대(2009년 GDP의 4% 수준) • 시민연대협약(1999)을 통해 비혼 동거인에게도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 • 혼외출생아에 대한 신분상 차별 금지 법제화(2006년)
스웨덴	 • 1980년 1.6명→1990년 2.14명으로 상승 • 2000년 1.5명→2010년 1.98명까지 상승	**양성평등적 가족정책** • 부모보험제도(1974):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%를 1년동안 보장 • 아빠 휴직할당(2002):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할당 • 아동수당의 인상(일반 근로자 급여의 1965년 10%, 1985년 15%) 및 추가 자녀 수당
독일	 • 1994년 1.24명→2016년 1.59명까지 상승	**2000년 이후 종합적인 가족정책** • 가족에 대한 효과적 금전지원,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 • 부모휴직급여(2007): 맞벌이 부모에게 임금의 67%에 해당하는 소득대체급여 지급 • 보육시설 확충, 전문직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
일본	 • 2005년 1.24명→2015년 1.46명까지 상승	**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 정비(엔젤플랜(1995), 자녀·육아비전(2010-2014년))** • 보육의 양적 확대, 출산·육아·간호 휴직제도, 아동수당 • 아동 돌봄서비스 신설 및 확대

자료: OECD family Database(2020)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.

출산율 반등의 해외 사례

● **우리나라보다 앞서 산업화와 고령화를 경험한 주요 OECD 국가들도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바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음([그림 5] 참조)**

- 합계출산율의 하락추세는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, 하락추세가 지속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하는 사례도 있었음
  - 프랑스, 스웨덴은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최저(1.5명~1.6명)를 기록하였으나,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1.7~2.0명 수준까지 회복
  -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.24명까지 하락, 이후 2016년 1.59명 수준까지 회복, 일본은 2005년 1.24명까지 하락, 이후 2015년 1.46명까지 상승

● **프랑스, 스웨덴, 독일 등은 비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의 회복이 가능[6)]**

-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 7가지 가족수당 신설, 아동·가족 관련 공공지출 확대(GDP의 4% 수준), 비혼 동거인·혼외 출생에게도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
  - 시민연대협약(1999)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
-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(1974), 아빠휴직할당(2002) 등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아동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추가자녀 수당을 신설
  -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%를 1년 동안 보장(부모보험제도),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(아빠휴직할당)
- 독일은 2000년 이후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금전지원,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 등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, 이민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 적극 유치
  - 부모휴직급여(2007)로 임금의 67% 소득대체급여 지급, 보육시설을 확충
  - 「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유럽연합(EU) 지침」(2012년) 시행
- 일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정책을 추진
  - 엔젤플랜(1995)과 자녀·육아비전(2010~2014년)을 통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, 출산·육아·간호 휴직제도, 아동수당 확대, 아동 돌봄서비스 신설 및 확대 등을 추진

정책적 시사점

● **최근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인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성평등적 가족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**

-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예상되며,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합계출산율의 추가 하락 억제 및 반등을 위한 정책의 모색 필요
  - 지금 태어난 출생아가 출산연령대가 되는 향후 20~30년 이내에 인구규모가 지금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음
- 출산율 회복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시점에 양성평등과 포용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였음

6) 배정아 외(2019), 「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연구」, 감사연구원·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.

발행처 |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|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담당 |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문의 | 02-6788-4750